



제25회 남양주시의회(제1차정례회)  
제 1 차 자 치 행 정 위 원 회

---

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3. 6. 13.

자치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서용관

#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2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## 2. 제안이유

- 정책자문관 운영 업무가 기획예산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, 법률자문관을 고문변호사로 명칭 변경 및 소송비용 지원대상 확대 등 송무업무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법률자문관을 고문변호사로 명칭 변경 및 업무이관에 따라 정책자문관 관련 조항 삭제 (제명 등 조례 전반)

- ▶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 →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

나. 소송비용 지급 세부기준 및 수임관련 조항 정비 (안 제4조 및 별표)

- ▶ 임기 중 수임한 건에 대하여 만료 후 확정시까지 수임 가능 조항 신설
- ▶ 화해, 소취하 등에서 변론이 2회 이하 속행된 경우 승소사례금 제외
- ▶ 토지수용재결사건은 착수금을 500만원 한도 지정 등

다. 소송비용 지원대상 확대 및 신청 시 확약서 제출 (안 제6조)

- ▶ 소송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적극 행정이 가능한 근무 환경 조성
- ▶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신청 시 확약서 제출

라. 그 밖에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 정비

#### 4. 참고사항

가. 참고자료 : 붙임1

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다. 관련부서 : 법무담당관

라. 입법예고 : 2023. 4. 20. ~ 2023. 5. 10.(20일) / 의견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정책 및 법률 자문관 업무가 분리·이원화됨에 따라 기존 조례 중 법무담당관 소관 사항인 법률 자문 관련 조항을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
  
- 주요 내용은 제명을 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하고 소송비용 지급 세부기준과 수임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, 소송지원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등 송무업무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

## □ 변호사법

제91조(징계 사유)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 그 형이 확정된 경우(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)
2.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 법을 위반한 경우
2.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
3.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

제97조(징계개시의 청구)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변호사가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변협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하여야 한다.

## □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제3조(산입할 보수의 기준) ①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(다음부터 ‘지급보수액’이라 한다)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.

②가압류, 가처분 명령의 신청,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, 각 심급단위로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. 다만, 가압류,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.

제4조(소송목적의 값등의 산정기준) ①제3조에 규정된 소송목적의 값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의 산정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.

②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청구취지 또는 신청취지를 기준으로 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 요인

- 「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」(개정 후 : 「남양주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」) 전부 개정
  -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재정비하여 불필요한 비용 절감.
  - 제6조의 소송비용 지원 대상을 전출자 및 퇴직자까지 확대함으로써 예산의 증가 발생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 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

### 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.

### 4. 작성자

- 법무담당관 김 진 배